International Labor Brief 국제노동브리프 | 2011년 10월호 pp.79~87
ⓒ 한국노동연구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영국

영국노총의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동향

권병희 (영국 셰필드대학교 박사과정 (사회정책), 고용노동부 서기관)

■ 머리말

영국 최대 노동조합단체인 영국노총(Trades Union Congress: TUC)은 지난 9월 12일부터 사흘간 런던 노총본부에서 제143차 정기대의원대회(The Annual Trades Union Congress)를 개최하였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보수-자민 연립정부의 재정긴축정책과 이에 따른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영국 노동조합운동의 현 단계 고민과 대응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 영국노총

영국노총(Trades Union Congress: TUC)은 1868년에 설립되었으며, 58개 소속 노동조합에 약 650만 명의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주요 소속 노조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유나이트(Unite, 조합원 147만 명),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주로 가입해 있는 유니슨(UNISON, 조합원 137만 명)과 GMB(조합원 60만 명), 공공부문과 서비스부문 근로자들이 주로 가입한 PCS(Public and Commercial Services Union, 조합원 30만 명) 등이며, 이 밖에도 프로축구선수노조(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조합원 2천 7백 명), 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National Association of Stable Staff, 조합원 1천 7백 명), 소방관노조(Fire Brigades'

Union, 조합원 4만 4천 명) 등 소규모 직종별 노동조합도 많다. 영국노총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정기대의원대회(Annual Congress)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매년 9월 사흘간 열리며[1] 소속 노조는 대의원대회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대의원들을 파견한다.[2] 일반위원회(General Council)는 5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노총의 일상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내용을 점검한다. 일반위원회 위원 중 26인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매월 한 차례 회의를 열며, 노총의 정책 집행 및 긴급 현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그 밖에 여성, 인종 등 주제별 위원회와 다양한 과제별 그룹(Task Groups)들이 있다. 2010년 회계연도의 총 수입은 515만 파운드(한화 950억 원), 총 지출은 498만 파운드(한화 920억 원)였다.

■ 주요 의제: 일반위원회 보고서

정기대의원대회 의제는 일반위원회가 의결하여 대의원대회에 제출하는 일반위원회 보고서(General Council Report)와 소속 노동조합이 미리 제기한 안건들로 이뤄진다. 일반위원회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영국노총의 주요 활동을 집약하고 현 정세하에서 노총의 향후 활동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주요 문건이다.[3] 보고서에서 다루는 노총의 정책 노선은 매우 넓은데, 청년층, 비정규직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조직 확대 전략,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반대 투쟁 등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의제에서부터 평등권, 연금, 사회보장제도, 거시경제 운용 방향 등 각종 사회경제정책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적소수자들의 권리 보장, 불치병 환자들에 대한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등에 대한 활동 등은 한국 노동조합운동에서는 보기 힘든 의제들이다.

1) 종전에는 나흘간 개최했으나, 대의원대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사흘간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 대의원은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 수 5,000명당 1명의 비율로 소속 노조에서 파견하는데 (조합원수 5,000명 미만의 노조는 2명의 대의원)로 2003년 대의원대회의 경우 대의원 수는 784명이었다 (남성 502명, 여성 282명). 출처: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 (2011), 국제노동단체 소개 – 영국 TUC.
3) 출처: TUC (2011), Congress 2011 General Council Report.

〈표 1〉 영국노총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일반위원회 보고서 개요

제1장 다함께 캠페인 (The All Together Campaign)	- 공공지출 삭감 등 정부 경제정책 반대 투쟁
제2장 단결 및 노동권 (Organising and rights at work)	조직확대 전략, 청년실업대책, 정부 노동관계법 개정 반대
제3장 평등권(Equal rights)	2010 평등법 검토, 공공부문 평등 의무, 동등임금, 정년제도 폐지, 취약계층 평등권 강화
제4장 경제 산업 정책 (Economic and industrial affairs)	거시경제 및 경제사회정책 동향, 노동시장 동향, 산업정책, 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정책, 주택, 에너지 정책, 공공서비스 및 연금정책, 보건 및 사회적 돌봄정책, 교육정책, 형사정책, 우정 및 미디어 정책
제5장 국제 연대 (Global solidarity)	노동조합간 국제 연대, 국제개발원조정책, 이주 노동자정책
제6장 교육훈련 및 기술 (Learning and skills)	교육훈련정책, 도제제도, 청년층 교육훈련 및 취업촉진, 성인 취업상담센터, 노총 교육센터, 노조간부 교육
제7장 근로자 보호 (Protecting people at works)	산업안전
제8장 지역 정책 (The regional dimension)	지역재생정책, 지역기업파트너십, 웨일즈 자치정책
제9장 캠페인 및 홍보	
제10장 영국노총 조직	
제11장 사망자 약력(Obituary)	- 최근 사망한 전 노조간부들의 약력 소개

제1장(The All Together Campaign)은 현 단계 영국노총의 가장 핵심적인 운동노선에 대한 경과 보고와 향후 방향을 다루고 있다. 2010년 5월 출범한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막대한 정부 재정적자의 삭감을 목표로 재정긴축, 공공서비스 축소, 공공부문 인력 감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국노총은 일관되게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난해 제142회 대의원대회에서도 주된 의제는 정부의 재정긴축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였는데, 이때 운동의 이름을 'The All Together Campaign'으로 정했다. 노총 지도부는 지난 3월 말에 조직한 전국적 시위(March for Alternative)에 50만 명이라는 노총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합원들이 참여했고, 다양한 지역 및 사회운동단체와 효과적으로 연대하여 언론을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모아내는 데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운동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연립정부의 긴축재정 및 공공서비스 삭감에 대한 반대 투쟁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면서 민간부문 근로자들과의 연계

[그림 1] 영국의 노동조합원 수 추이 : 1892~2010[4)]

를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노선 등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 데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브렌단 바버 위원장도 대의원대회 첫날 기조 연설에서 기존의 긴축재정 반대 운동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대중운동으로 노총의 의제를 변경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새로운 녹색 경제(Green economy)에 기반한 경제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노총은 이 운동의 추진을 위해 조합원 1인당 10펜스씩 추가로 거둬 향후 캠페인을 치를 수 있는 1백만 파운드(한화 18억 4천만 원) 규모의 자금을 모으기로 결의하였다.

일반위원회 보고서의 제2장은 단결 및 노동권(Organising and rights at work)에 관한 것이다. 영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1970년대 말에는 50% 중반대를 기록했으나(1979년 55.8%), 1980년대 보수당 대처 정권 기간 동안 크게 떨어졌다[그림 1]. 1990년대 들어 영국노총의 조직 확대 운동, 노동당 블레어 정권 등장 이후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에서도 조직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감소 추세는 비교적 완만해졌다[그림 1]. 영국 정부가 실시하는 가구 표본조사인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 결과에 따르면 2010년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에 비해 0.8%p 감소한 26.6%로 총 650만 명의 근로자가

4) 출처: Achur, J. (2011) Trade Union Membership 2010. p. 3.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부문 56.3%, 민간부문 14.2%).[5]

1990년대 초반부터 노총은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재출발(relaunch)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조직 현대화 전략, 노조원에 대한 서비스 제고, 정부, 사용자, 사회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소수인종, 성적 소수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보다 광범위한 근로대중을 대변하는 정치 노선의 채택 등을 포함한다. 1996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새노조(New Unionism) 운동은 신규 조합원 확대를 위한 사업이며, 여성, 청년층, 새로운 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주된 조직 대상으로 조직아카데미(Organising Academy) 설립,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청년층이 각별한 관심 대상인데,[6] 이들은 연립정부의 공공재정 삭감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연립정부는 영국노총이 야심차게 전개했던 미래직업기금(Future Jobs Fund)과 저소득 청년층의 교육을 돕는 급여(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를 폐지하였는데, 노총은 폐지된 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한편, 청년 조합원 조직(Young Members Conference, Young Members Forum)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연립정부는 고용심판위원회(Employment Tribunals) 구제신청 비용 신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자격요건으로 1년 이상 근무를 2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 단체행동 요건 강화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총은 정부의 법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영국노총은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3장 평등권(Equal rights) 분야의 경우 2010년에 시행된 새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이행을 위해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가이드라인 발간, 국가인권위원회(EHRC)와의 협력, 공공기관의 의무 강화 등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동등임금(Equal pay), 국가인권위원회(EHRC) 개편, 정년제도 폐지, 여성, 인종, 장애인 근로자의 평등권 제고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었다. 독특한 주제들은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의 효과적 활용, 최근 서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조력자살(asisted suicide)에 대한 연구 지원 등이다. 영국노총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기

5) 출처: Achur, J. (2011) Trade Union Membership 2010.
6) 전체 연령의 실업률이 7.9%인 데 비해 18~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0년 12월 말 현재 17.6%나 된다. 출처: TUC(2011), Congress 2011 General Council Report, p. 17.

위해 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제4장 경제 산업정책(Economic and industrial affairs)은 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거시경제지표와 고용, 임금 등 노동시장 동향을 짚고 정부의 경제 및 사회정책 동향과 이에 대한 노총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노총은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시경제의 적절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정부의 조달사업(Procurement)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 밖에 주요 정책 분야와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기업 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정책: 기업 인수합병, 종업원지주제
- 연금제도: 정부 연금개혁 동향 및 입장
- 사회보장제도: 통합급여 도입 등 정부 복지개혁안 반대
- 최저임금제도 인상 및 근로시간 정책
- 주택 정책, 기후 변화 및 에너지정책
- 철도 등 대중교통정책, 공공서비스, 공공부문 급여 및 연금
- 보건 및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정책: NHS 개편안 등
- 교육정책: 초중등 및 대학교육, 조기교육
- 형사정책, 우정정책(Royal Mail), 미디어, 예능, 디지털 경제정책
- 런던 2012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대응

영국노총의 노동시장정책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교육훈련 및 기술(Learning and skills) 정책이다(제6장). 근로자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투자를 늘리고, 청년층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제제도(Apprenticeship)를 활성화하고, 녹색기술을 개발함과 아울러 고용기술위원회(Commissions for Employment and Skills)와 산업별 · 직종별 기술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노총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성인 취업상담센터, 노총 교육센터, 노조간부 교육 등도 주요 정책 수단이다.

일반위원회 보고서는 제5장 국제연대(Global solidarity) 분야에서 각국 노동조합들 사이의 국제연대, 저개발국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원조정책, 유럽 이주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조

합 가입 등 노동권 보장, 국제노동권 강화를 위한 연대정책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밖에 산업안전 등 근로자 보호(Protecting people at works, 제7장),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지역재생정책, 지역기업파트너십, 웨일즈 자치, 실업자 상담센터 등 지역정책(The regional dimension, 제8장), 캠페인 및 홍보(제9장)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 주요 의제: 소속 노조 제출 안건

일반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된 의제에 더해 소속 노동조합이 사전에 제출한 안건들이 대의원대회에서 토론된다. 의제별로 보면 쟁의행위 요건 강화 등 연립정부의 노동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안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 성적 소수자 등 취약근로계층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각 부문별 위원회에서 평등권 분야에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사회정책의 경우, 연립정부의 공공부문 재정지출 삭감의 영향을 받는 각 노조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특히 일자리, 집, 연금 등을 지키고, 녹색 제조업, 정부조달, 외국자본의 인수, 국가 통제 금융기관들의 산업투자 등 대안적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Unite) 등이 제기되고 있다. UNISON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연금 분야의 의견, 청년위원회의 도제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엔지니어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는 Prospect 노조는 저탄소 경제를 위한 투자 및 연구개발 확대, Green Investment Bank 정책을 요구하였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의 축소 반대 및 투자 확대(교통노조 RMT), NHS 개혁에 대한 반대(UNISON), 관절염 환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항정신성 의약품 남용에 대한 정책 건의(방사선기사노조 Society of Radiographers), 공립교육의 질 강화와 연립정부의 자유학교(Free School) 우대정책에 대한 반대(NASUWT, Nation Union of Teachers 등 교사노조), 예술정책에 대한 지원 강화(음악가노조 Musicians' Union와 작가노조 Writers' Guild of Great Britain)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프로축구선수노조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4개 나라(countries)를 통합한 통합 영국 국가대표팀이 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공공부문 총파업

정기대의원대회 기간 중에 언론의 주된 관심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총파업 동향이었다. 현재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공공부문노조와 영국노총은 단체교섭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 근로자 약 300만 명이 참가하는 24시간 총파업을 오는 11월 30일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미 주요 공공부문노조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브렌단 바버 위원장은 기조 연설에서 정부의 연금 삭감 시도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파업은 대중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 대표가 첫날 기조 연설에서 공공부문 총파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상당한 파문을 몰고 왔다. 그는 파업은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실수(mistake)'라면서 노동당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노동당과 노동조합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노동조합운동이 민간부문과 새로운 산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노동당수의 발언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연설 도중 상당수 대의원들이 야유를 하기까지 했다. 밀리반드 노동당 대표는 지난 6월 공공부문의 연금개혁 반대 파업 당시에도 연립정부의 미온적 협상 태도를 비난하면서도 노동당은 "항상 학부모들의 정당이며" "이들을 대신해서 노사가 협상을 타결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을 얻은 적이 있다. 노동당은 탄생 역사에서부터 노동조합운동에서 출발했으며, 서로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노동조합은 노동당 정치자금의 80%를 부담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정당의 대표가 협상을 통한 해결과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시민들의 입장을 더 중시한 것이 눈여겨볼 만하다.

■ 맺음말

영국노총의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세계경제 위기와 연립정부의 재정긴축에 직면하여 영국

노동조합운동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영국노총은 대중적 시위, 총파업과 함께 대안적 경제정책을 모색함으로써 지식인 사회와 여론의 지지를 추진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범위한 범위의 의제를 통해 소속 조합원의 이익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 성적 소수자, 소수인종 등 다양한 근로취약계층을 포괄하고 있다. KLI

참고문헌

-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2011), 「국제노동단체 소개 – 영국 TUC」, http://www.koilaf.org
- 안정화(2003), 「각국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의 조직구조 및 운영방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오건호(1999), 「영국 노동조합의 조직구조 – 철도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월간 노동사회』 9월(제36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윤진호(2006), 「선진국 노동조합의 조직혁신정책과 한국노동운동에의 시사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Achur, J.(2011), "Trade Union Membership 2010", London: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 Brown, W.(2011), "1997–2010: A Post Mortem International Review: Industrial Relations in Britain under New Labour",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3(3). pp. 402~413.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2011), "Statistical Press Release: Trade Union Membership 2010", London: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 Heery, E.(1998), "The Relaunch of the Trades Union Congres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36(3). pp. 339~360.
- Trades Unions Congress (TUC)(2011), "Congress 2011 Agenda: Motions and nominations", London: TUC.
- TUC(2011), "Congress 2011 General Council Report", London, TUC.